



Dignity for Soldiers, 군인에게 존엄성!

전화번호 | 02-7337-119 FAX | 02-2677-8119

이 메 일 | mhrk@mhrk.org

홈페이지 | www.mhrk.org

주 소 | [04057]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태인빌딩 4층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육군 72사단장 갑질 및 피해자 인사보복 대응 기자회견

담 당 함성현 국방감시간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끊이지 않는 장군 갑질, 필라테스 기구까지 산 이종화 72사단장

- 국방부, 두릅따가닭장 설치·교회출석강요 등 갑질 익명제보 묵살 뒤 사단장은 인사보복 강행 -

군인권센터는 올해 2월 초부터 비서실 군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육군 제72사단장 이종화 준장(육사 48기)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종화 준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사단장으로 부임했고, 그에게 사단장 비서실과 공관이 주어지자마자 부하들에게 갑질을 시작했다.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갑질은 무리하고 황당했다. 밖에서 두릅나무이 군장에 가득 메워질 정도로 따게 시킨 다음 포장을 하게 하는가 하면, 닭장을 만들 목적으로 톱으로 초목 정리를 시키고 직접 나무를 깎아 닭장을 만들게 하기까지 했다. 공관에 필라테스 기구를 들이기 위해 소파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허위 신청해놓고 180만원 상당의 가구 구매 비용을 일부 전용하여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하기도 했고, 예하 부대장들을 모아놓고 운동경기를 하던 중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간부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한 일 역시 파악되었다.

이종화 사단장은 주말에 부인과 교회 갈 목적으로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간부의 휴식권 침해하여 운전을 시켰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간부에게는 교회에 오라며 강요하기까지 했고 주말에 교회를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는 “임무인데 빠지는 게 맞느냐”라며 갑질과 명령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사고 방식을 보여줬다. 휘하 간부가 공관 내 사적지시에 대해 사단장에게 지침을 물어보자 사단장은 “알아서 하는거지 임마”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교묘하게 흘리듯 지시를 내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서실 근무자들은 어디까지나 지휘관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임에도 본연의 임무와는 관계없는 사단장의 허드렛일에 동원되었다. 갑질에 시달린 비서실 근무자들은 ‘내가 이러려고 군인의 길을 걸었냐’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단장 집에 물건을 옮겨주었던 군수 담당 군인들도 “이건 아니다”, “못 참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피해자 군인들은 용기를 내어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인 케이휘슬에 먼저 내부 도움을 요청했지만, “익명신고는 신고자를 아예 특정할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규정되어 있는 신고자 성실 의무를 담보할 수 없는 바, 증거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라며 반려되었고 이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제보는 묵살되었다고 한다.

장군이 갑질로 부하들을 괴롭힌 사례는 국민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을 통해 고위급 장교의 갑질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휘관이 휘하 장병들을 ‘노예’처럼 다뤘다는 사실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2023년 7월과 8월, 각각 백마회관과 공개토회관에서 또 다른 지휘관 갑질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에 더해 최근 박정택 전 수도군단장의 갑질 사태도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반복되는 갑질에도 국방부가 그때그때 땀질 방식으로 사건에 대처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니 이제는 제보가 있어도 묵살하고 지나가기에 이른 것이다. 박정택 전 수도군단장의 갑질이 피해자들의 용기로 세상에 알려진 후 군인권센터는 고위급 장교들의 갑질과 사적 지시에 대해 땀질로만 대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장군 지휘부를 보좌하는 비서실과 부관직 업무실태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방부가 갑질 제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들은 고립되었다. 그 사이 사단장은 제보한 군인들을 겨냥해 전체 부사관 180여명 중 103명의 보직에 대한 재판단을 지시했다. 보직이 바뀔 군인 동료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속해있을 보직을 섞어 피해자들끼리 연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방식을 예고한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 대한 2차 가해임은 물론 4분기에 예고된 부사관 인사까지 무리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지지기반을 사단장의 권력으로 숙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 언제까지 장군 갑질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 생각인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임박한 지금 국방부는 즉시 이종화 사단장과 사단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갑질과 보복성 2차가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 그리고 장군 비서실과 부관 임무 수행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을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에도 장군 한 명의 보직해임·보직분리 등 땀질식 대응만으로 넘기려고 한다면, 군이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국방부는 끊이지 않는 장군의 갑질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2025. 7.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